

낙농발전대책협의회, 운영계획

지난해부터 원유 잉여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낙농가·유업체·정부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잉여량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두유·쥬스 등 대체음료 소비 확대에 의해 시유 소비는 감소한 반면, 생산비 이상 원유가격 보장, 전량 집유 등으로 원유 생산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유 소비를 확대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낙농육우협회·농협중앙회·낙농진흥회와 함께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소비 홍보, 우유요리 개발·보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당장의 생산 과잉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낙농진흥회는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시행하여 농가의 자율적인 감산을 유도하였으나 절반 수준의 농가는 감산한 반면 절반수준의 농가들이 오히려 증산하여 감산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증산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원유생산감축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3월부터 낙농가대표·집유조합장 등 20명과 50여일간 10차례 회의를 통해 원유 생산감축대책(안)을 마련하고, 낙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차례 회의를 거쳐 7월 9일 심야회의에서 보완 대책에 대해 합의하여 7.16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장시간의 협의과정을 통해 정부는 정부대로 낙농가대표는 낙농가대표대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일반유업체도 지난해 말부터 잉여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생산량을 설정하고 초과 생산량에 대하여 정상유대의 50% 또는 분유로 지급하는 감산대책을 추진하였다.



박병홍
농림부 축산경영과사기관

이러한 낙농진흥회와 일반유업체의 감산대책 추진으로 지난해 6월 1만 9천 7백톤까지 갔던 분유 재고가 9월말 현재 1만 9백톤으로 안정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우유 수급불균형이라는 당장의 급한 불은 꺾지만, DDA 협상 등 최근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수입이 어려운 시유는 경쟁력이 있으나 유제품은 생산비가 높아 경쟁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DDA협상 이후에는 관세율 인하 등으로 유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유시장을 시유·유제품·분유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시유는 사실상 수입이 어려우므로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분유 이외의 유제품은 유업체에서 국내·외 가격차이와 품질 및 소비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국산원유 사용비율을 조절할 것이고 앞으로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제분유를 제외한 분유는 유업체에서 국·내외 가격변화에 따라 국산과 수입산을 선택할 것이므로 정책적인 측면은 적다고 하겠다.

따라서 유제품 시장 확대를 통한 우유소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업체는 국산유제품 개발과 국산 원유 사용에 힘써야 할 것이며, 낙농가들은 수입 유제품과 경쟁가격 수준으로 원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농가 집유단계에서는 품질별로 차등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으나, 집유·가공단계에서 차별화 하

지 않아 유제품 가공용 원유의 가격 경쟁력과 시유의 품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지난 '99년에 설립된 낙농진흥회의 집유비율이 28% 수준에 그치는 등 원유 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9월 3일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낙농산업발전 중장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책협의회는 농림부, 도, 낙농진흥회, 낙농육우협회 및 낙농가대표, 농협(집유조합 포함), 유가공협회 및 유업체,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관련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객관성 있는 논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인 영남대 조석진 교수를 선정하였다. 대책협의회는 낙농산업 발전 중장기대책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낙농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과제 선정, 실무작업반에서 검토·마련한 낙농산업발전 중장기대책(안)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실무작업반은 농림부·낙농진흥회·농협중앙회·낙농육우협회·유가공협회·서울우유 실무자로 구성하였으며,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낙농 관련 자료 검토·분석, 각종 회의자료 작성 및 보고, 낙농산업 발전 중장기 대책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대책협의회는 향후 낙농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진로 및 운영 개선, 우유 수요 확대, 중장기 우유 수급안정,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대과제를 선정하고,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낙농진흥회의 향후 진로 및 운영 개선문제는 낙농(집유)조합의 기능 및 역할 개선방안과 병행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 우유수급안정방안으로는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 계절별·지역별 수급불균형 해소방안 등이 검토된다. 우유 수요확대방안은 치즈 등 고부가가치



곡산유제품 개발·보급, 목장형 소규모 유가공장 육성, 군·학교 우유급식 등 단체급식 확대방안, 체계적인 소비촉진 홍보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토과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체세포·유지방 등 품질에 따른 원유가격 산정체계, 깨끗한 목장만들기사업 추진, 원유 품질등급별 구분 집유, 원유 검사 및 표시제도, 젖소개량 등 생산성 향상 방안, 낙농가 소득안정화 방안, 유제품 수출, 해외낙농업투자 등 낙농업의 해외 진출방안, 한·중·일의 우유 수급안정방안, 정부·농협·낙농진흥회·지자체·낙농가의 역할분담방안 등이다.

그 동안 3차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낙농산업의 현황·문제점 및 향후 낙농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작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대책협의회는 첫 회의를 통해 검토과제 및 낙농산업 발전대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작업반에서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안을 종합하여 대책협의회 회의를 거쳐 낙농산업 발전 중장기 대책을 금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제 금년초 원유 생산감축대책 마련시 겪었던 갈등은 잊어버리고, 우리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다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기대해 본다.